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이념적 편향성*

지병근 ■ 조선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념적 편향성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실시된 전국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 이유를 다수제적 선거제도나 관용이 부족한 정치문화보다 대통령, 정당, 언론, 극우 성향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의 비민주적 정치 행태와 소득격차 심화에서 찾는 이들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이념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윤석열 정부 시기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인식하며, 진보적일수록 이와 정반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민주주의 후퇴, 이념,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I. 서 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위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에 관한 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제3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2346).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Email: jbkkoh@chosun.ac.kr)

물결에 합류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킨 사례로 알려진 한국 또한 21세기에 접어들어 시작된 민주주의 후퇴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프리덤하우스의 자유 지수나 EIU 민주주의 지수를 보더라도 한국 민주주의는 진전하기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만약 그렇다면 시민들은 과연 그리고 얼마나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주목하는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은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정당 간 극심한 갈등, ‘행정부의 독단’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무능함이나 의지 부족,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지원의 감소 등을 지적한다(Bermeo 2016; Boese et al. 2022; Gerschewski 2021; Haggard & You 2015; Laebens & Lührmann 2021). 한국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후퇴 또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여야 간의 극한 갈등, 소위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국정운영 등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권혁용 2023; 최장집 2020).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의 평가는 이들의 평가와 얼마나 일치할까?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민주주의 지수가 포함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Lührmann & Lindberg 2019; Merkel & Lührmann 2021; Tomini & Wagemann 2018).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와 권위주의 체제로의 퇴행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반면, 점진적이고 ‘모호한’ 민주주의 후퇴의 징후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연구들이 미국을 비롯한 소수 사례에 초점을 두고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Graham & Svobik 2020; Levitsky & Ziblatt 2018).²⁾

이 연구는 한국을 사례로 민주주의 후퇴와 그 원인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 1)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한국 민주주의 퇴행에 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프리덤하우스의 정치적 권리 지수(7점 척도)가 한 단계 추락하였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한 2022년에도 한국은 프리덤하우스 종합지수(101점 척도)가 전년도에 비해 조금 하락하였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민주주의 지수 또한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평가된 24개국(전체 167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하락하였다. 2015년 이후 매년 실시된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현재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1점 척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0점, ‘매우 민주적이다’ 10점)는 평균 6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성은 2018년 6.8점에서 2022년 6.5점으로 하락하였다(통일연구원 2014-2020, 2021-2022).
- 2) 물론 이들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 사례에 대한 일화적 설명(anecdotal explanation)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분석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 이념적 성향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다양한 때로는 대립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당파적 이해관계는 물론 이념적 성향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민주주의의 진전과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질적 심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인식 또한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자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민주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이념적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4) 따라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그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함께 한국 사례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을 소개할 것이다. 아울러,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논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분석이 일화적 사례 소개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일부 지표에만 의존하기보다 여러 지표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본 연

3)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적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공고화되지 않는다.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들과 정치 엘리트가 민주주의를 ‘유일한 게임의 룰’로 여기는 정치문화가 확립되지 못하면 정치체제의 하위 수준에서 비민주적 제도를 도입하거나 비민주적 행태(사회적 균열의 심화와 정치적 대립을 유발하는 정치 선동, 상호 존중과 관용의 민주적 정치문화 상실, 민주주의 체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탈세 등 각종 위법 행위, 권력 남용을 비롯한 견제와 균형 원리의 파괴 행위 등)가 나타날 수 있으며 결국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IU(2023)는 한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으로 군부나 강한 지도자에 의한 통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민주주의 후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4) 최근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본회의(2023.3.29.)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대통령실 2023). 하지만 진보적인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의 원인을 그가 지적했던 가짜뉴스나 이를 이용한 정치적 선동보다 정부가 국회나 야당을 무시하고 외교정책이나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제기하곤 한다.

구가 활용한 설문조사 자료 및 문항에 대한 소개와 분석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IV장에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시작된 시점과 후퇴 수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V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그 함의와 함께 향후 연구과제를 논할 것이다.

II.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한국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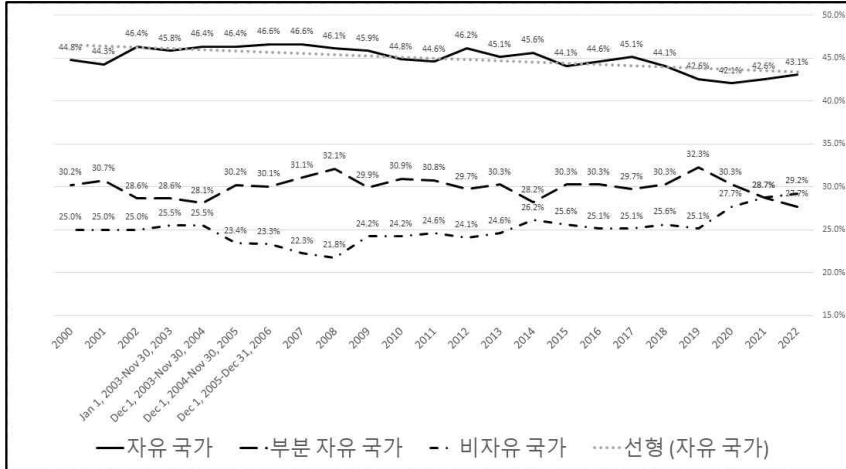
1.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급속히 늘어났지만 10여 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감소하는 소위 ‘제3의 권위주의화 물결’ 현상이 발생하였다.⁵⁾ 아래의 그림 1-1에 잘 나타나 있듯이 프리덤하우스가 분류한 자유국가(free country)만 보더라도 그 비율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자유국가(non-free country)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⁶⁾

5) 다이아몬드(Diamond 2020, 1)는 제3의 민주화 물결이 발생한 1974~2005년 사이에 역사상 최초로 과반수 국가가 민주화되었지만, 2006년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2023c)는 세계적인 자유가 17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핵심적인 하락 요소라고 보았다(자유국가의 수는 1973년 44개(총 148개국)에서 2022년 84개(총195개국)로 증가). 이행론(transitology)을 다룬 연구들이 기존에는 주로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나 공고화에 주목했지만, 최근에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민주주의의 질이 악화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 현상은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체도를 국가가 주도하여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 것”(Bermeo 2016, 5), 혹은 “정치체제 내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질의 악화를 포함하는 점진적인 체제 내의 변화”(Waldner & Lust 2018, 95)라고 할 수 있다.

6)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민주주의 회복력(democratic resilience),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후퇴하였다가 다시 민주주의의 질을 회복하는 동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웨보르스키(Przeworski 2019)는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위협하고, 그 원인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림 1-1> 자유 지수 유형(자유, 부분적 자유, 비자유)에 따른 국가 비율(2000~2022)



* 출처: Freedom House (2023b)

민주주의 후퇴는 1) 민주주의 체제가 혼합체제 혹은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현상, 즉 민주주의 붕괴(democratic breakdown)뿐만 아니라 2)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민주주의의 질이 퇴행하는 현상, 즉 민주적 후퇴(democratic regression) 등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권위주의화(autocratization)를 모두 포함한다(Tomini & Wagemann 2018). 그런데 이 시기에 나타난 대부분의 민주주의 후퇴는 권위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아니라 “덜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였다(Mechkova et al. 2017). 이는 거셴브스키(Gerschewski 2021)가 러시아, 터키, 베네수엘라와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 정치체제 수준의 “권위주의화(autocratization)”가 나타났지만 이를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군부 쿠데타나 외국의 침공에 의한 권위주의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민주적 침해(democratic erosion)”가 제3의 권위주의화 물질의 양식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민주주의의 종말”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Lührmann & Lindberg 2019; Wunsch & Blanchard 2023).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었다. 예를 들어 카우프만 외(Kaufman & Haggard 2019, 418)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원인을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1)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제약하는 사회적 양극화(social polarization) 및 체제의 기능장애(dysfunction) 그리고 2) 엘리트 양극화(elite polarization)와 전간기 유럽처럼 “극단주의자의 선

거 승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실패.” 아울러 이들은 민주주의 후퇴의 경로를 1) 양극화된 계급 또는 정체성 균열에 의한 중도정치세력의 약화(양극화로 인한 관용과 인내심 약화), 2) 독재자의 선거 승리가 의회를 지배하는 다수파로 전환, 그리고 3) 행정부를 이용한 수평적 책임성 약화 등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⁷⁾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에 관한 국내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윤민(2021)은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 후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불평등이 증가하면 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배계층에게 재분배 요구 수용에 대한 부담을 주어 이들이 억압정책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화를 억제할 우려가 있다는 보익스(Boix 2003)나 불평등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호울(Houle 2009)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는 V-Dem의 민주주의 지수를 이용하여 1973년 이후 2019년까지 194개국의 패널자료를 분석하고,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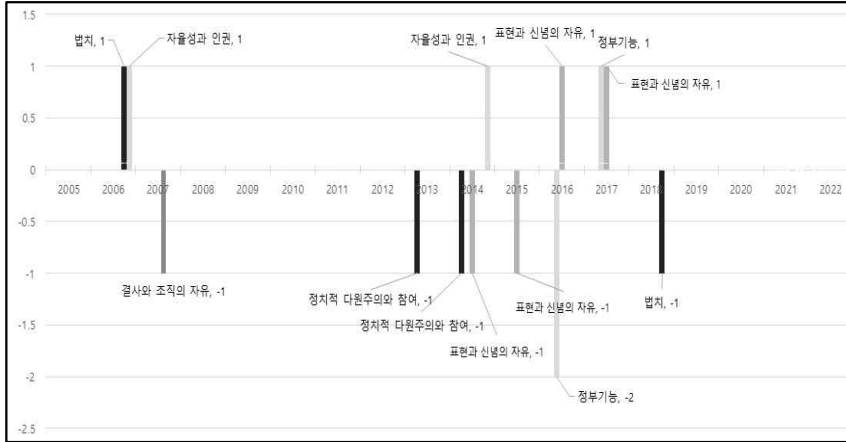
2.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 지수(Freedom Index, 1~7: 1=자유, 7=비자유)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2년 시민 자유(Civil Liberty)가 2점,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가 1점이었으나, 이듬해부터 후자는 2점으로 변경되었다. 자유 지수 총점(0~100)은 이명박 정부 시기 86점을 유지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부터 매년 1점씩 하락하여 2016년에는 82점이 되었다. 아래의 그림 1-2에 나타나 있듯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4점으로 자유 지수가 일부 회복(표현의 자유, 정부기능 각 1점)하였으며,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3점을 유지하고 있다(시민 자유-범치가 1점 하락, 2003-2023).⁸⁾

7) 코페지(Coppedge 2017)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경로를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전통적인 경로와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정부로의 권한 집중에 의한 수평적 책임성(horizontal accountability)의 침해 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8) 한편, EIU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가지 차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평가(최대 10점)하며, 한국(종합 8.03점)은 2022년 선거과정에서 비교적

〈그림 1-2〉 프리덤하우스 자유 지수 하위 범주의 변화(한국)



* 출처: Freedom House (2023a)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한 국가이지만, 이와 동시에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강우진 2013). 민주주의 연구자들 사이에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후퇴는 이명박 정부를 시발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정점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김용복 2010; 임혁백 2021; 최장집 2016; Boese et al. 2022; Gerschewski 2021; Haggard & You 2015; Laebens & Lührmann 2021).⁹⁾ 예를 들어, 김용복(2010)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시민들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줄속 강행한 것 외에도 미디어 관련법의 ‘날치기’ 처리, 용산 참사와 2009년 쌍용차 파업의 강제 해산과 사법처리,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을 민주주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항목, 특히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에서 각각 7.22와 6.25라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EIU 2023).

9) 흥미롭게도 프리덤하우스의 자유 지수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이후에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대통령 또한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민경탁 2020). 강우진(2013)은 아시아바로미터(2011년 조사자료)와 코리아바로미터(2010년 조사자료) 등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부 시기 법의 지배, 민주적 책임성, 자유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V-Dem Project의 선거민주주의 지수와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추이분석을 시도한 권혁용(2023)을 참조.

의 퇴행의 근거로 제시하였다.¹⁰⁾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유종성 2014; 최장집 2016). 최장집(2016, 415)은 이 시기 한국 민주주의가 “과거처럼 초헌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헌법 아래에서 공적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정치 체제 분류를 새롭게 해야 하는 위험 지대에 한 발짝 한 발짝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¹¹⁾ 레벤스와 뤼어만(Laebens & Lührmann 2021)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 민간인(언론인) 사찰이 이루어지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제약과 야당이 단일후보로 맞서지 못해 2012년 대선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결국 박근혜 정부 시기에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프로그램 운영 등 또 다른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¹²⁾ 거쉐브스키(Gerschewski 2021, 52) 또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헝가리와 베네수엘라의 “독재적 법률주의(*autocratic legalism*) 메카니즘”, 즉 “비자유주의적인 목적으로 현행 법률의 점진적 전환(*gradual conversion of existing laws for illiberal purposes*)”이 나타났다고 보았다.¹³⁾

-
- 10) 김영명(2014) 또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권문제가 등한시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그는 노무현 정부 또한 통합적 지도력이 부재하였으며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강우진·강문구(2014, 265)는 법의 지배와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후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흥미롭게도 이는 민주화 과정에서 “선거체제의 제도화에 중심을 둔 이행과 공고화 과정이 낳은 부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논의는 비록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수독점적 정당체제와 사회적 양극화(계층, 지역, 기업 차원)의 문제를 다루었던 김정훈(2007)과 같은 민주주의 공고화와 심화에 관한 선행연구들과는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 11) 최장집(2016, 424, 429)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대표 내지 통치자의 선출만 있고, 그를 선출한 시민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체제”인 “국민투표식 민주주의(*plesbiscitarian democracy*)”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로 이어진 “강력한 국가주의의 유산”과 함께 이와 짝을 이룬 “약한 시민사회”에서 찾았다. 그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국가에 “흡수 통합되고”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정당의 취약성”이 현저하며, “정당이 아닌 대통령 선거운동 캠프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캠프 정부의 출현”, “시민사회 공론장의 황폐화” 등을 비판하였다.
- 12) 레벤스와 뤼어만(Laebens & Lührmann 2021)은 뤼어만 외(Lührmann et al. 2020)가 주목했던 세 가지 책임성(정부와 국회 및 사법부와 같은 감독기관 간의 수평적 책임성, 정부와 유권자 및 정당 간의 수직적 책임성, 미디어와 시민사회조직 간의 대각 책임성)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베냉, 에콰도르와 함께 한국을 비교분석하였으며, 한국이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피할 수 있었던 11개국 가운데 현직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후퇴한 3개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제기되어왔다. 최장집(2020, 18, 19)은 제21대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화와 “강한” 국가에 통합된 “약한” 시민사회가 정당발전을 지체시켰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박근혜 퇴진으로 이어진 촛불시위에 동원된 “진보적 시민운동”이 “진보적 정당”을 대신하여 문재인 정부를 성립시키고 지지집단이 되면서 국가에 흡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율적 시민운동의 소멸”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¹⁴⁾ 아울러 그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시발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이 한국정치와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혁백(2021, 156)은 한국이 “촛불혁명”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고 보았다. 비록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하였지만,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라고 단언하였다. 보이세 외(Boese et al. 2022)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으며, 이를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피하고 ‘붕괴 회복력(breakdown resilience)’을 보여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보았다.

이처럼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지속 혹은 회복에 대한 대립된 해석은 정당과 시민 운동에 대한 이들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최장집

-
- 13) 정태욱(2009)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종하기보다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최경준(2017)은 한국에서 선거법 집행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주화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 실시된 역대 총선(13대~19대, 1988~2012)에서 입건된 선거운동원 비율을 분석하여 그 비율이 여당보다 야당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야당의 선거법 위반자 수는 338명(77.5%)으로 여당의 98명(22.4%)보다 3배나 많았다.
 - 14) 임혜란(2018, 347) 또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정당정치의 실패와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세력 기반의 와해”에서 찾았으며, 세계화에 따른 계급정치의 약화와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정당제도의 약화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그녀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개혁이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다원적 정치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15)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정치를 보는 것을 비판하고 정당 중심의 민주적 경쟁을 중시하는 최장집의 주장에 대하여 장상철(2022, 180)은 “문제가 있는 기존의 정당 정치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들이 올바른 민주 정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앞서 김원(2003)은 최장집의 접근법이 “민주화 담론의 국가화”와 국가 중심의 “개혁 담론”의 문제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박영균(2012, 175-176) 또한 최장집의 정당 정치 중심의 접근법이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위기를 “한국적 특수성”으로 간주하고, “신자유주의에서의 대의제 및 정당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지 않고 “민주주의의 이상인 자기 통치 원리를 배제”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20)은 다원적 이익의 대표 체계와 정당 체계의 발전이 필요한데도 민주화 이후 ‘반정치’ 성향의 한국 시민운동이 정당과 시민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정당을 왜소화시켰으며, 정치의 중심이 제도 밖의 광장으로 이동하면서 심각한 정치 위기를 불러왔다고 보는 반면, 임혁백(2021)을 비롯하여 ‘광장 정치’를 중시하는 이들은 시민운동 그 자체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동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흥미롭게도 권혁용(2023, 43)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인 2016-17년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었지만, 이는 민주주의 퇴행이 아니며, 정작 그 직후(행정부 권력증대, 반대당 괴롭히기, 허약한 국회 등)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기라고 주장하였다.¹⁶⁾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이념적 차원에서 훨씬 확연하게 나타났다. 일부 보수적 성향의 연구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이념적 성향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혹은 ‘친북’ 성향이며 이들이 추진한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김영호(2018, 171)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좌파세력들이 교육, 정당, 종교, 노동, 문화, 언론, 법조 영역에 침투하여 시민사회에서 좌파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등장할 수 있었고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했다”며,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⁷⁾ 양승태(2020, 214)는 문재인 정부가 “허구와 위선의 역사의식”에 사로잡혀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조장하며, 급기야 민주주의마저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중융합주의를 넘어 대중독재를 부추기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학준(2021, 262) 또한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형성한 기본적 가치인 ‘북한식 공산 독재체제에 대한 반대’와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친북한적·친중공적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해 있으며, 이 세력이 ‘좌파정권’의 중핵을 차

16) 권혁용(2023, 39)은 한국에서 자신과 다른 당파성을 갖는 이들을 적대시하는 정서적 양극화는 “부정적 당파성”의 심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적 가치와 규범, 제도를 잠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17) 김영호(2018, 165, 171)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하여 “‘국회독재’(elective despotism)를 정당화시켜주는 잘못된 판결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된 것은 “전체주의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세력 가운데 일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체제유지 세력에게 ‘시민사회의 재탈환’이란 중차대한 과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하고 그 노선을 지향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한국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립된 해석은 학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앞서 지적하였지만, 시민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부나 정당이 보여주는 모습을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¹⁸⁾ 이와 관련하여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이념적 성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크리슈나라잔(Krishnarajan 2023, 475)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는 시민들이 관용과 성찰의 부족, 정책 선호의 일치 때문에 비민주적 행위를 수용한다는 기존 민주주의 연구자들의 접근법은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민주적 행동을 “합리화(rationalization)”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민들이 비민주적 행동을 수용하는 것은 이를 비민주적이지만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기보다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을 포함한 22개 국가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해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비민주적 행위를 민주적이라고 합리화(민주적 합리화, democratic rationalization)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¹⁹⁾ 더 나아가 그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도전에는 “핵심적인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과 “포퓰리스트 행태” 외에도 민주적 규율과 규범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비민주적 행위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도 민주주의 후퇴를 유발하는 비민주적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은 크리슈나라잔(Krishnarajan 2023)의 주장처럼 이념적으로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²⁰⁾ 진보적인 이들은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생한 파업이나 점거 농

18) 일찍이 정태욱(2009, 39)은 이명박 정부 시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도 이를 “자유”에 초점을 두는 입장과 이명박 정부처럼 국가주의적으로 “법질서 확립”에 초점을 두는 입장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충환(2013)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아니라 검찰권력에 대한 시민적 견제력(contestability)의 제도화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 그는 민주주의 인식이 정치적 관점과 조응하는 과정을 “비민주적 행위를 무시하고 그들의 정책적 동의를 민주주의 인식에 전달하는 과정(민주적 전달, democratic transmission)”과 민주주의를 “절차적 규율과 규범”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국가적 선”으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민주적 상승, democratic elevation)” 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20) 또 다른 예로, 최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주 69시간 근로시간 허용’ 방안이 과연 노동권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격히 다를 수 있다. 진보적인 이들은 이 방안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성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 야당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국회가 제출한 해임건의안이나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등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행위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비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합리화하고, 그보다는 현행 법률과 충돌하는 파업과 농성, 부패혐의가 있는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거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과 무분별한 입법추진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2023년 초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디자인한 ‘민주주의 후퇴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웹 조사 및 모바일 조사 병행, 조사 기간 2023.1.20.~2.8., 표본크기 1,000명, 성·연령· 시도 인구비례 할당). 이 조사에는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직접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지, 민주화 이후 등장했던 역대 정부의 집권기 가운데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부록 1 참조).²¹⁾

아울러, 이 조사에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EIU가 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데 활용했던 정부기능(정부운영, 견제와 균형 시스템), 선거과정(정당 민주주의, 공정 선거), 정치문화(합의), 시민자유(언론과 시민단체 행태) 등 여러 차원에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1) 정부 기능 차원에서 정부운영(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반인권적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여기는 반면, 보수적인 이들은 효율적인 노동시간 배분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합리적 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21) 이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나 중요성 인식이 약화되는 추이를 분석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응답자들의 동의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후퇴가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일 시점의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만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 여야 사법부·언론의 행정부 견제력 부족), 2) 선거 과정 차원에서 정당 민주주의(정당 운영의 비민주성, 정당 및 정치인의 부정부패, 당내 팬덤의 과도한 영향력)와 공정 선거(양대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 3) 정치문화 차원에서 정당과 정치인 간 정치문화(양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 경쟁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관용 부족), 4) 시민자유 차원에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무책임한 언론보도, 언론의 가짜뉴스 제작, 극우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이 민주주의 후퇴의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수준을 묻는 질문(1~5: 1=전혀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²²⁾ 아울러 이 조사에는 일부 선행연구들이 주목했던 불평등과 국제환경 차원에서 소득격차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국제환경이 민주주의 후퇴의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수준을 묻는 질문도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이 포함된 ‘민주주의 후퇴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민주주의 후퇴 및 그 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념적 성향을 비롯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²³⁾ 이를 위한 기본모델에는 종속변수로 ‘민주주의 후퇴 인식’이 포함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수준(1~4: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 변수는 서열변수이기에 이 연구는 서열로지스틱회귀모델(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이념적 보수성(1~3: 1=진보(0~4), 2=중도(5), 3=보수(6~10))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선호도(민주당 선호도-국민의힘 선호도, -10~10)이 포함되며, 통제변수로는 성별(남성=1, 여성=0), 연령,

22) 방법론적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하려면 정치 체제 하위의 정치체도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타당도를 제고해야 하며, 만약 그 가운데 일부 제도나 정책에만 주목할 경우 ‘개별주의 오류(individualistic fallacy)’를 범하기 쉽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경우에도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요인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박진우·이정훈(2016)은 한국과 같이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정치문화와 삶의 양식을 보편화”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통치자에 대한 “조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거나, 뉴스가 사회 세력의 목소리를 대표(representation)하고, “숙의(deliberation)”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감시견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언론의 “민주적 기능”을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23) 특히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행정부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삼권 분립’의 원리에 근거한 한국의 민주적 정치체제를 위협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들 가운데 정부운영과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거주지(대구·경북, 부·울·경, 호남) 더미 변수, 교육수준(1~4: 1=고졸 이하, 2=전문대 재학/졸업, 3=4년제 대학 재학/졸업, 4=대학원 재학 이상), 소득(월가소득 1~4: 1=300만원 미만, 2=300~499만원, 3=500~699만원, 4=700만원 이상) 등을 포함하였다. 그 외에 이 연구는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정부 인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를 기본 범주로 다항로지스틱모델(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기초 통계: 민주주의 후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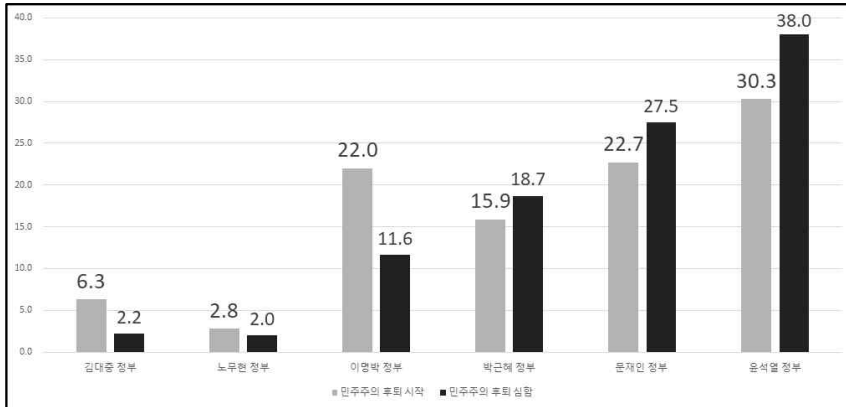
1) 민주주의 후퇴의 시작 및 심각한 후퇴 시기

‘민주주의 후퇴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의 민주주의 후퇴를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의 비율은 무려 72.3%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로 특정하여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63.8%(638명)에 달하였다(부록 1, 문 1과 문 2 참조).

그렇다면,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한 시기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아래의 그림 2는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부록 1, 문 3과 문 4 참조). 이 그림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후퇴가 시작된 시점이나 가장 많이 후퇴한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각각 30.3%와 38.0%로 제일 높았다. 둘째, 민주주의 후퇴가 현재의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 시기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민주당이 집권했던 정부 시기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다음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로 응답자들이 지목한 것은 문재인 정부(22.7%, 27.5%)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후퇴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시기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여기는 이들은 7% 미만이었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를 지목한 이들은 3% 미만이었다.

〈그림 2〉 민주주의 후퇴의 시작과 심각성(%)



* 출처: 한국리서치 202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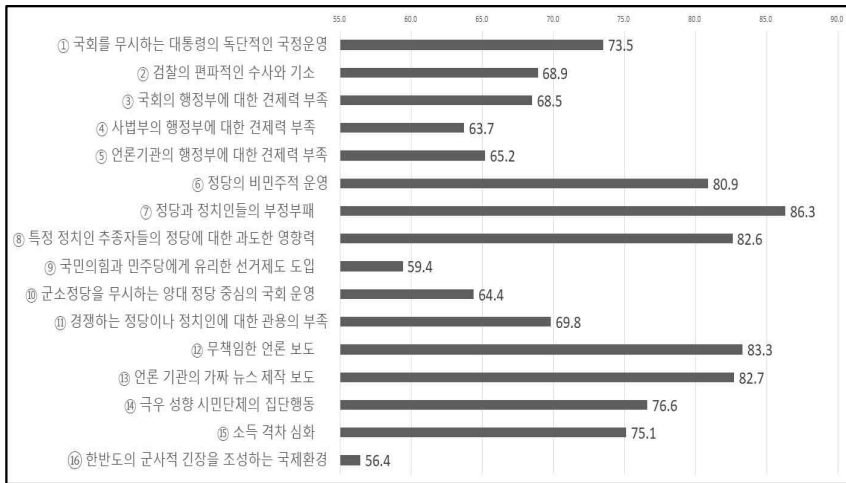
2)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 인식

아래의 그림 3은 각 정치행태가 민주주의 후퇴의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나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와 기소와 같은 행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 후퇴 요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7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사법부, 언론의 견제력 부족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 또한 60%가 넘었다.

둘째, 정당, 언론 기관, 그리고 극우 시민단체의 행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과 정치인의 부정부패,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 정당에 대한 특정 정치인 추종세력의 과도한 영향력, 무책임한 언론 보도, 언론기관의 가짜 뉴스 제작 보도 등이 민주주의 후퇴 요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80%가 넘었다. 극우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을 지목한 이들도 76.6%에 달하였다. 셋째, 이들에 비해서 군소정당을 무시하는 양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과 경쟁자에 대한 관용의 부족 등 정치문화적 특성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비율은 각각 64.4%와 6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59.4%에 머물렀다. 넷째,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목해왔던 소득 격차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감하는 이들의 비율 또한 75.1%에 달하였다. 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국제환경의 경우는 56.4%에 그쳤다.

(그림 3)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 인식(%)



* 출처: 한국리서치 202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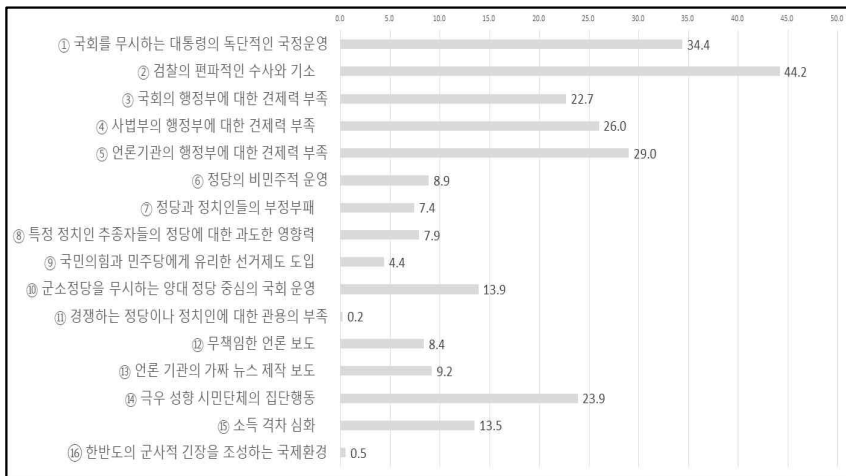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으로 시민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방식이나 검찰의 편파 수사 및 기소보다 정당이나 정치인(비민주성, 부정부패, 팬덤 정치)과 언론기관(가짜뉴스 제작 보도, 무책임한 보도)의 행태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소득격차의 심화, 극우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을 우려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았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사법부·언론의 견제력 부족, 정치문화(양대 정당 중심의 국회운영, 관용의 부족)를 우려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양대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나 국제환경에서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을 찾는 이들이 가장 적었다.²⁴⁾

24) 이 조사에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국민의힘(91.2%), 대통령실(90.6%), 검찰(87.3%), 사법부(83.2%), 언론기관(82.1%), 감사원(81.7%), 극우 시민단체(81.7%), 경찰(74.9%), 민주당 등 야당(69.8%)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이념적 성향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차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격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4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각 항목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 차이(진보적 응답자 비율-보수적 응답자 비율)를 보여준다(부록 2-1, 부록 2-2 참조). 특히, 진보적 응답자들과 보수적 응답자들 간에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또는 기소,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사법부·언론의 견제력 부족, 극우성향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 차이는 20%p보다 컸다. 특히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가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 차이는 무려 44.2%p에 달하였다(전체 86.2%, 진보 91.2%, 보수 47.0%).

〈그림 4〉 이념적 성향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 원인 인식의 차이(%p)



* 출처: 한국리서치 2023.01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당 및 정치인들의 정치적 관용의 부족(0.2%p)과 국민의 힘과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4.4%p), 군사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국제환경(0.5%p)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 차이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요인

(비민주적 운영, 부정부패, 팬덤의 과도한 영향력)과 언론 요인(무책임한 언론 보도, 언론 기관의 가짜 뉴스 제작보도)의 경우에도 10%p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소득 격차 심화와 군소정당을 무시하는 양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감하는 이들의 비율 차이는 각각 13.5%p와 13.9%p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⁵⁾

2. 민주주의 후퇴 시기 인식 결정요인 분석

아래의 표 1은 서열로지스틱회귀모델(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표의 모델 1~모델 2에서 종속변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이며, 모델 3~모델 4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이다.²⁶⁾

이 표의 모델 1에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념적 성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산비 0.44). 이와 달리 호남 거주지를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은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표의 모델 2에서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국민의힘 대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민주주의 후퇴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산비 1.30). 다른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호남 거주지의 영향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면 모델 1에서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25)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념적으로 진보(0~4)는 30.7%, 중도(5)는 37.8%, 보수(6~10)는 31.5%로 나타났다. 진보적 응답자와 보수적 응답자 가운데 이 기관들이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의 비율 차이 또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격하였으며, 검찰(35.0%p), 감사원(32.6%p), 사법부(30.3%p), 국민의힘(28.8%p), 경찰(27.8%p), 대통령실(22.7%p), 극우시민단체(17.7%p), 언론기관(13.1%p) 등의 순위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후퇴 요인 인식 간 상관성에 관한 이원분석 결과는 부록 2-2, 민주주의 후퇴 인식과 후퇴 요인 인식의 결정요인을 추가 분석한 결과는 각각 부록 3-1, 부록 3-2 참조. 부록 3-1에서 정부기능, 선거과정,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의 변수 구성요소(평균)는 부록 2-1 참조.

〈표 1〉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결정요인

변수	모델 (1)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후퇴		모델 (2)		모델 (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후퇴		모델 (4)	
	회귀계수 (coefficients)	승산비 (odds ratio)	회귀계수 (coefficients)	승산비 (odds ratio)	회귀계수 (coefficients)	승산비 (odds ratio)	회귀계수 (coefficients)	승산비 (odds ratio)
이념적 보수성(3)	-0.82*** (0.08)	0.44*** (0.04)			-1.14*** (0.08)	0.32*** (0.03)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선호			0.27*** (0.02)	1.30*** (0.02)			0.46*** (0.02)	1.58*** (0.03)
남성	0.03 (0.12)	1.03 (0.12)	0.15 (0.12)	1.16 (0.14)	-0.06 (0.12)	0.94 (0.11)	0.06 (0.13)	1.06 (0.14)
연령(5)	-0.05 (0.04)	0.96 (0.04)	-0.01 (0.04)	0.99 (0.04)	-0.08** (0.04)	0.92** (0.04)	-0.03 (0.05)	0.97 (0.04)
호남	0.52** (0.21)	1.68** (0.35)	0.16 (0.21)	1.17 (0.25)	0.73*** (0.21)	2.07*** (0.43)	0.28 (0.23)	1.33 (0.30)
대구·경북	-0.05 (0.20)	0.95 (0.19)	0.36 (0.21)	1.44 (0.30)	-0.63*** (0.20)	0.53*** (0.11)	-0.11 (0.22)	0.90 (0.20)
부산·울산·경남	-0.10 (0.17)	0.91 (0.15)	-0.00 (0.17)	1.00 (0.17)	-0.08 (0.17)	0.93 (0.16)	0.10 (0.18)	1.11 (0.20)
교육수준(4)	0.09 (0.07)	1.09 (0.07)	0.12 (0.07)	1.13 (0.08)	-0.02 (0.07)	0.98 (0.06)	0.01 (0.07)	1.01 (0.07)
소득(4)	-0.02 (0.06)	0.98 (0.06)	-0.03 (0.06)	0.97 (0.06)	0.08 (0.06)	1.09 (0.06)	0.09 (0.06)	1.09 (0.07)
/cut1	-4.56*** (0.40)	0.01*** (0.00)	-2.67*** (0.36)	0.07*** (0.02)	-5.10*** (0.40)	0.01*** (0.00)	-2.97*** (0.38)	0.05*** (0.02)
/cut2	-2.59*** (0.38)	0.08*** (0.03)	-0.48 (0.34)	0.62 (0.21)	-3.18*** (0.38)	0.04*** (0.02)	-0.27 (0.35)	0.77 (0.27)
/cut3	-0.49 (0.37)	0.61 (0.22)	1.94*** (0.34)	6.96*** (2.39)	-1.52*** (0.36)	0.22*** (0.08)	2.06*** (0.36)	7.85*** (2.83)
사례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한국리서치 2023.01

* 주: *** p<0.01, ** p<0.05, ()안의 수는 표준오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모델 3~모델 4에서 각 변수들의 영향은 모델 1~모델 2와 크

게 다르지 않았다. 모델 3에서 이념적 성향, 모델 4에서 민주당 선호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에 각각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승산비 0.32, 1.58).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인식은 악화되는 반면,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선호도가 클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산비를 고려하면 모델 1~모델 2에 비해서 이념적 성향과 정당 선호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델 3에서 호남 이외에 연평과 대구·경북 거주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2는 다항로지스틱모델(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정부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상대위험도, Relative-risk Ratios)이며, 여기에서 기본 범주는 윤석열 정부 시기이다. 이 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정부 인식은 이념적 보수성의 함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의 모델 1~모델 5에서 이념적 보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대 위험도가 1보다 큼). 이는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윤석열 정부 시기에 비해 김대중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과거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델 6~모델 10에서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선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윤석열 정부 시기에 비해서 과거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와 더불어 이러한 경향성이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비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념적 보수성의 상대적 위험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관련한 이 표의 모델 3, 모델 4에서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모델 1, 모델 2, 모델 5에서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선호의 영향은 이와 정반대였다. 예를 들어, 모델 10에서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선호가 한단계 증가할수록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를 윤석열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시기로 여길 가능성이 0.54배(1-0.46) 감소하는 반면, 모델 8에서 이명박 정부로 여길 가능성은 0.22배(1-0.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표에서 주목할만 것은 거주지 효과에 관한 것이다. 예상했던 것처럼 모델 5에서 호남 거주가 문재인 정부시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는 인식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화시키는 반면, 대구·경북 거주

는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모델 3과 모델 8에서 대구·경북 거주가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를 윤석열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 시기라고 인식할 가능성을 강화하는 반면, 모델 4와 모델 9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라고 인식할 가능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 인식 결정요인(Relative-Risk Ratios)

변수	(1) 김대중	(2) 노무현	(3) 이명박	(4) 박근혜	(5) 문재인	(6) 김대중	(7) 노무현	(8) 이명박	(9) 박근혜	(10) 문재인
이념적 보수성(3)	3.04*** (0.97)	3.80*** (1.30)	1.66*** (0.24)	1.85*** (0.24)	5.57*** (0.75)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선호						0.52*** (0.04)	0.52*** (0.05)	0.78*** (0.03)	0.78*** (0.02)	0.46*** (0.02)
남성	1.18 (0.55)	1.49 (0.73)	1.02 (0.22)	1.32 (0.25)	0.93 (0.18)	1.04 (0.51)	1.29 (0.66)	0.92 (0.21)	1.19 (0.23)	0.73 (0.18)
연령(5)	1.13 (0.19)	0.82 (0.13)	0.87 (0.07)	0.68*** (0.05)	1.26*** (0.09)	1.08 (0.19)	0.78 (0.13)	0.90 (0.07)	0.70*** (0.05)	1.17 (0.10)
호남	0.00 (0.00)	0.00 (0.00)	0.94 (0.31)	0.80 (0.24)	0.23*** (0.09)	0.00 (0.00)	0.00 (0.00)	1.11 (0.38)	0.93 (0.29)	0.51 (0.25)
대구·경북	2.39 (1.67)	0.61 (0.65)	3.01*** (1.06)	1.21 (0.47)	2.54*** (0.84)	1.24 (0.91)	0.32 (0.35)	2.16** (0.79)	0.88 (0.35)	1.29 (0.51)
부산·울산·경남	2.70 (1.40)	0.00 (0.00)	1.17 (0.39)	1.61 (0.42)	1.34 (0.35)	2.35 (1.29)	0.00 (0.00)	1.06 (0.36)	1.48 (0.40)	1.23 (0.40)
교육수준(4)	0.65 (0.16)	0.73 (0.19)	0.88 (0.11)	1.08 (0.12)	1.10 (0.11)	0.65 (0.17)	0.72 (0.20)	0.90 (0.11)	1.10 (0.12)	1.11 (0.14)
소득(4)	0.70 (0.16)	0.98 (0.22)	0.93 (0.10)	0.92 (0.08)	0.86 (0.08)	0.61** (0.14)	0.88 (0.20)	0.90 (0.10)	0.90 (0.08)	0.74*** (0.08)
상수	0.02*** (0.02)	0.01*** (0.02)	0.28 (0.18)	0.32** (0.18)	0.01*** (0.01)	0.48 (0.60)	0.58 (0.74)	1.45 (0.89)	2.11 (1.12)	1.15 (0.73)
사례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한국리서치 2023.01

* 주: *** p<0.01, ** p<0.05, ()은 seE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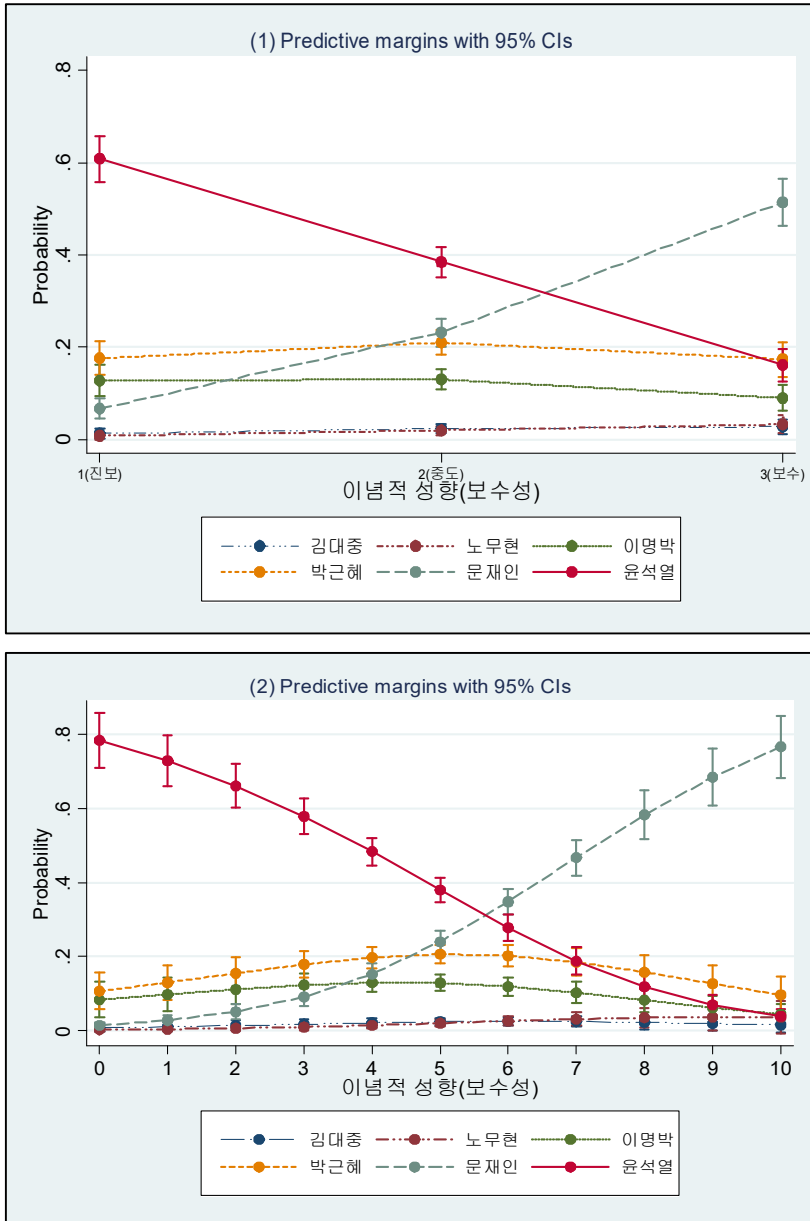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 대구·경북은 장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이 지역이라는 점과 함께 비록 유감을 표명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녀의 구속수사에 관여했던 것에 대한 앙금이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모델 4, 모델 5, 모델 9에서 연령이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윤석열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울·경 거주와 교육수준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5는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 인식에 대한 이념적 성향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보여준다(진보(0~4) 30.7%, 중도(5) 37.8%, 보수(6~10) 31.5%; (1) 3점 척도와 (2) 11점 척도 이용). 흥미롭게도 이념적 성향의 효과는 다른 어떤 정부시기보다 문재인 정부 시기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에서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이 그림에 잘 나타나듯이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를 문재인 정부 시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로 인식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 위치가 3점 이하인 경우 윤석열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인식할 확률이 50%가 넘으며, 6점 이후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라고 인식할 확률이 더 커지며, 8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확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그 이전 정부 시기에 대해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로 지목하는 경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그 이유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는 한국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이념적 편향성이 최근에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이전 정부 시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내면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이 향후 정치적 양극화를 지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 인식



* 출처: 한국리서치 2023.01

V. 결 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한국의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여기는지,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가 언제라고 여기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EIU 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정부기능, 선거과정,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과 함께 불평등과 국제환경의 차원에서 민주주의 후퇴 요인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실 민주주의 후퇴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민주주의 후퇴 인식 조사(2023)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시작 시기와 가장 많이 후퇴한 시기 모두 윤석열 정부를 지목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후퇴한 원인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사법부의 제한된 견제력과 같은 정부 기능, 정치적 관용의 부족이나 양대 정당 중심의 국회운영과 같은 정치문화적 요인, 양대 정당에게 유리한 다수제적 선거제도보다 정당 및 정치인의 행태(부정부패, 비민주성, 팬덤 정치)와 함께 왜곡된 언론 기능(가짜 뉴스 제작 보도, 무책임한 보도),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 극우시민단체의 집단행동, 소득 격차의 심화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인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격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언론의 제한된 견제력, 극우성향의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이 민주주의 후퇴의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의 비율은 보수적인 응답자들보다 진보적인 응답자들에게서 2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들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기에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념적 편향성은 다른 정부 시기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인식에서 현격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예방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

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70%가 넘는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을 주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나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에서 찾는다는 점은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과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다. 특히, 다수의 시민들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책임을 야당의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이용한 선동에 전가하며 무시하기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다. 물론 언론 기관 역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지속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특종에 얽매이지 않고 정론을 생산하는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자유, 인권,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편향된 해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이념적 성향에 따라 민주주의를 개념화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나 ‘선택적 해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이념적 차원에서 진영 논리에 갖혀 현실을 왜곡·과장하여 정치적 경쟁 상대를 ‘악마화’하고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상이한 이념적 성향을 갖는 이들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표현과 신념의 자유 등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을 체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성, 특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여기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이념적 성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분석에 활용한 설문조사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후퇴 인식에 앞서서 시민들이 민주주의 그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념적 성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자유, 공정, 관용, 평등, 국가 등에 관한 태도) 가운데 어떠한 요소가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차이를 유발하였는가를 충분히 분석하고 설명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단일 시점에 시행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기에 시계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역대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변화와 지속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주의 후퇴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우진. 2013.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2(3), 173-202.
- _____, 강문구. 2014. “이명박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의 질.” 『경제와 사회』 104, 265-299.
- 권혁용. 2023.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 『한국정치학회보』 57(1), 33-58.
- 김영명. 2014.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한국정치연구』 23(3), 137-162.
- 김영호. 2018.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다시 논한다.” 노재봉, 김영호, 서명구, 유광호, 조성환 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파주: 북앤피플, 136-180.
- 김용복. 2010.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동북아연구』 15, 153-182.
- 김원. 2003.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했나?” 『정치비평』 10, 381-414.
- 김정훈. 2007. “민주화 20년의 한국 사회.” 『경제와 사회』 74, 34-65.
- 김학준. 2021. “‘위기론’과 ‘후퇴론’ 속의 한국 민주주의: 2000년대에 출판된 한국 정치학자들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실』 131, 255-274.
- 남윤민. 2021.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후퇴.” 『비교민주주의연구』 17(2), 135-166.
- 대통령실. 2023. “尹 대통령 “가짜민주주의 전 세계적으로 고개 들어...혁신과 연대로 민주주의 되살려야.” 대통령실 뉴스룸 (3월 29일),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WZVaDczq?fbclid=IwAR3D8GspLI46rg5TMJuODA3aT-PN5_JiaQ_ulPD6ow_R3GuQC8SqIUeEfqg (2023/06/29 검색).
- 민경락. 2020.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연합뉴스』 (10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063053004> (2023/06/29 검색).
- 박영균. 2012.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론’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 『민족문화연구』 56, 175-207.

- 박진우, 이정훈. 2016. “민주화 시대의 언론과 ‘민주주의적 가치’의 후퇴.” 『한국방송학보』 30(5), 43-80.
- 양승태. 2020. 『대한민국 무엇이 위기인가?: 이 시대의 국가적 상황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서울: 철학과현실사.
- 유종성. 2014.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동향과 전망』 90, 9-44.
- 이충한. 2013.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 『범한철학』 70, 457-486.
- 임혁백. 2021.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서울: 김영사.
- 임혜란. 2018.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한국정치연구』 27(1), 347-373.
- 장상철. 2022.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사회와 이론』 41(1), 165-197.
- 정태욱. 2009.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 『법학연구』 12(3), 37-63.
- 최경준. 2017. “선거 민주주의와 법치: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법집행의 공정성.” 『한국경찰학회보』 19(6), 309-342.
- 최장집. 2016. “한국 정치의 문제, ‘국민투표식 민주주의’를 논하다.” 『문학과 사회』 29(1), 415-442.
- _____. 2020.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한국정치연구』 29(2), 1-26.

여론조사 자료

- 통일연구원. 2014-2020. “KINU 통일의식조사.” https://www.kinu.or.kr/main/board/index.do?code=SPxGPQC5YH7g&nav_code=mai1674792835 (2023/08/08 검색).
- _____. 2021-2022. “KINU 통일의식조사.”
- 한국리서치. 2023.01. “민주주의 후퇴 인식 조사.”

영문 자료

- Bermeo, Nancy. 2016. “On Democratic Backsliding.” *Journal of Democracy* 27(1), 5-19.
- Boese, Vanessa A., Martin Lundstedt, Kelly Morrison, Yuko Sato & Staffan I. Lindberg. 2022. “State of the World 2021: ”

- Autocratization Changing its Nature?" *Democratization* 29(6), 983-1013.
-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ppedge, Michael. 2017. "Eroding Regimes: What, Where, and When?" *V-Dem Working Paper Series 57*, 1-405.
- Diamond, Larry. 2020. "Democratic Regress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cope, Methods, and Causes." *Democratization* 28(1), 22-42.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2023. *Democracy Index 2022: Frontline Democracy and the Battle for Ukraine*. London: EIU.
- Freedom House. 2023a. "Comparative and Historical Data Files: Aggregate Category and Subcategory Scores, 2003-2023."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Data> (accessed 12 July 2023).
- _____. 2023b. "Comparative and Historical Data Files: Country and Territory Ratings and Statuses, 1973-2023."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Data> (accessed 12 July 2023).
- _____. 2023c. "Freedom in the World 2023: Marking 50 Years in the Struggle for Democracy." (June)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23/marking-50-years> (accessed 12 July 2023).
- Gerschewski, Johannes. 2021. "Erosion or Decay? Conceptualizing Causes and Mechanisms of Democratic Regression." *Democratization* 28(1), 43-62.
- Graham, Matthew H. & Milan W. Svobik. 2020. "Democracy in America? Partisanship, Polarization, and the Robustness of Support for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4(2), 392-409.
- Haggard, Stephan & Jong-Sung You. 2015.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5(1), 167-179.
- Houle, Christian. 2009. "Inequality and Democracy: Why Inequality Harms Consolidation but Does Not Affect Democratization." *World Politics* 61(4), 589-622.
- Kaufman, Robert & Stephan Haggard. 2019. "Democratic Decline in the

- United States: What Can We Learn from Middle-Income Backsliding?" *Perspectives on Politics* 17(2), 417-432.
- Krishnarajan, Suthan. 2023. "Rationalizing Democracy: The Perceptual Bias and (Un)Democratic Behavi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7(2), 474-496.
- Laebens, Melisa & Anna Lührmann. 2021. "What Halts Democratic Erosion? The Changing Role of Accountability." *Democratization* 28(5), 908-928.
- Levitsky, Steven & Daniel Ziblatt. 2018. *How Democracies Die*. New York: Crown Publishers.
- Lührmann, Anna & Staffan I. Lindberg. 2019. "A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Is Here: What Is New About It?" *Democratization* 26(7), 1095-1113.
- _____, Kyle L. Marquardt & Valeriya Mechkova. 2020. "Constraining Governments: New Indices of Vertical, Horizontal, and Diagonal Accountabil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4(3), 811-820.
- Mechkova, Valeriya, Anna Lührmann & Staffan I. Lindberg. 2017. "How Much Democratic Backsliding?" *Journal of Democracy* 28(4), 162-169.
- Merkel, Wolfgang & Anna Lührmann. 2021. "Resilience of Democracies: Responses to Illiberal and Authoritarian Challenges." *Democratization* 28, 869-884.
- Przeworski, Adam. 2019. *Crisis of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mini, Luca & Claudius Wagemann. 2018. "Varieties of Contemporary Democratic Breakdown and Regression: A Comparative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7(3), 687-716.
- Waldner, David & Ellen Lust. 2018. "Unwelcome Change: Coming to Terms with Democratic Backsliding."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93-113.
- Wunsch, Natasha & Philippe Blanchard. 2023. "Patterns of Democratic Backsliding in Third-wave democracies: a Sequence Analysis Perspective." *Democratization* 30(2), 278-301.

Abstract

Ideological Bias in the Perception of Democratic Backsliding

Byong-kuen Jhee ■ Chosun University

Analyzing a public survey dataset, this study examines how ordinary citizens perceive democratic backsliding and to what extent their evaluations are ideologically biased in Korea. It shows that most respondents believe that Korean democracy is in retreat and that it has become the worst since the Yoon'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y attribute its responsibility to undemocratic behavior of various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president and his presidential office, the prosecutors' office, political parties, the media, the ultra-right civil organizations, and severe income gap, rather than the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and political culture. It is also notable that public perception of democratic backsliding depends on their ideological orientations, which are notable toward the most recent administrations. Empirical test results show that the more conservative they are, the stronger their belief that democracy has retreated the most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ather than other administr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laims that more efforts are needed to evaluate the current issues of democracy without ideological bias, along with sincere awareness of the overwhelming public concern that Korean democracy is retreating, and rehabilitate democracy.

Key Words: democratic backsliding, ideology, president, legislature, judiciary

부록

〈부록 1〉 설문조사 문항(민주주의 후퇴 인식 조사(2023.1.20.~2.8), 일부 선별)

- 문 1.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조금 반대 ③ 조금 찬성 ④ 매우 찬성
- 문 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문 3.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후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김대중 정부 ② 노무현 정부 ③ 이명박 정부 ④ 박근혜 정부
 ⑤ 문재인 정부 ⑥ 윤석열 정부
- 문 4.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언제 가장 많이 후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김대중 정부 ② 노무현 정부 ③ 이명박 정부 ④ 박근혜 정부
 ⑤ 문재인 정부 ⑥ 윤석열 정부
- 문 5.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태/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제도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동의 ⑤ 매우 동의 ⑥ 잘모르겠다

A. 정부기능 -정부운영	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	C. 정치문화 합의	⑩ 군소정당을 무시하는 양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
- 견제와 균형 시스템	②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	D. 시민자유 - 언론	⑪ 경쟁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관용의 부족
	③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 부족		⑫ 무책임한 언론 보도
	④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⑬ 언론 기관의 가짜 뉴스

<p>B. 선거과정 정당 민주주의</p> <p>- 공정 선거</p>	<p>견제력 부족</p> <p>⑤ 언론기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 부족</p> <p>⑥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p> <p>⑦ 정당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p> <p>⑧ 특정 정치인 추종자들의 정당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p> <p>⑨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p>	<p>- 시민단체</p> <p>E. 불평등 - 소득 격차</p> <p>F. 국제환경</p>	<p>제작 보도</p> <p>⑭ 극우 성향 시민단체의 집단행동</p> <p>⑮ 소득 격차 심화</p> <p>⑯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국제환경</p>
---	--	--	--

문 6.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후퇴에 다음의 기관, 조직, 국가들이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통령실 ② 여당인 국민의힘 ③ 민주당 등 야당 ④ 검찰
- ⑤ 경찰 ⑥ 감사원 ⑦ 사법부 ⑧ 언론기관 ⑨ 극우 시민단체
- ⑩ 극좌 시민단체 ⑪ 북한 ⑫ 미국

〈부록 2-1〉 기술 통계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민주주의 후퇴	1,000	2.95	0.85	1	4
윤석열 정부시기 민주주의 후퇴	1,000	2.86	0.97	1	4
민주주의 후퇴 시작	1,000	4.37	1.48	1	6
민주주의 가장 많이 후퇴	1,000	4.81	1.24	1	6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	987	4.04	1.11	1	5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	986	3.93	1.28	1	5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 부족	979	3.91	1.03	1	5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 부족	977	3.86	1.05	1	5
언론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 부족	979	3.88	1.07	1	5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	982	4.23	0.86	1	5
정당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983	4.45	0.83	1	5
특정 정치인 추종자들의 과도한 영향력	981	4.34	0.86	1	5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	977	3.74	1.03	1	5
군소 정당 무시 양대 정당 중심 국회 운영	980	3.82	1.03	1	5
경쟁하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관용의 부족	979	3.86	1.05	1	5
무책임한 언론 보도	982	4.35	0.86	1	5
언론 기관의 가짜 뉴스 제작 보도	985	4.36	0.87	1	5
극우 성향 시민단체의 집단행동	982	4.19	1.00	1	5
소득 격차 심화	989	4.08	0.92	1	5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국제환경	977	3.66	1.01	1	5
정부기능(상기 항목 1~5 평균)	990	3.92	0.90	1	5
선거과정(상기 항목 5~9 평균)	990	4.19	0.67	1.25	5
정치문화(상기 항목 10~11 평균)	989	3.84	0.84	1	5
시민자유(상기 항목 12~13 평균)	989	4.30	0.76	1	5
이념	1,000	2.01	0.79	1	3
민주당-국민의힘	1,000	0.91	4.54	-10	10
남성	1,000	1.51	0.50	1	2
연령	1,000	3.35	1.45	1	5
호남	1,000	0.10	0.30	0	1
대구경북	1,000	0.10	0.29	0	1
부울경	1,000	0.15	0.36	0	1
교육	1,000	2.50	0.96	1	4
소득	1,000	2.45	1.09	1	4

* 출처: 한국리서치 2023.01

〈부록 2-2〉 이념적 성향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 인식

항목	이념 성향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사례 수	Pearson chi2	항목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사례 수	Pearson chi2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	진보	2.9	4.9	92.2	306	163.10***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도입	8.9	29.8	61.3	302	18.32**
	중도	9.0	19.8	71.2	368			7.4	32.2	60.3	363	
	보수	24.0	18.2	57.8	313			14.1	29.5	56.4	312	
	전체	11.9	14.7	73.5	987			10.0	30.6	59.4	977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	진보	3.6	4.9	91.5	306	197.44***	군소 정당 무시 양대 정당 중심 국회 운영	7.6	21.6	70.8	305	27.02***
	중도	13.4	18.3	68.4	367			6.6	28.1	65.3	363	
	보수	32.3	20.5	47.3	313			14.4	28.5	57.1	312	
	전체	16.3	14.8	68.9	986			9.4	26.2	64.4	980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 부족	진보	4.0	15.6	80.5	302	72.10***	경쟁하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관용의 부족	9.6	18.2	72.3	303	24.31***
	중도	7.9	23.8	68.3	366			9.9	24.2	65.9	364	
	보수	18.3	24.4	57.2	311			13.2	15.1	71.8	312	
	전체	10.0	21.5	68.5	979			10.8	19.4	69.8	979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 부족	진보	8.2	14.5	77.3	304	72.78***	무책임한 언론 보도	1.7	6.0	92.4	302	48.08***
	중도	7.7	29.5	62.8	363			3.8	20.2	76.0	367	
	보수	14.5	34.2	51.3	310			4.2	12.8	83.1	313	
	전체	10.0	26.3	63.7	977			3.3	13.4	83.3	982	
언론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 부족	진보	5.9	13.4	80.7	305	105.99***	언론 기관의 가짜 뉴스 제작 보도	2.3	6.6	91.1	304	
	중도	6.3	30.2	63.5	364			3.3	20.1	76.7	369	39.60***
	보수	20.0	28.1	51.9	310			3.8	14.4	81.7	312	
	전체	10.5	24.3	65.2	979			3.2	14.1	82.7	985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	진보	2.3	9.8	87.9	305	25.94***	극우 성향 시민단체의 집단행동	3.3	6.6	90.2	305	87.16***
	중도	3.3	20.1	76.7	364			4.4	21.9	73.8	366	
	보수	5.1	16.0	78.9	313			10.9	22.5	66.6	311	
	전체	3.6	15.6	80.9	982			6.1	17.3	76.6	982	
정당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진보	2.0	5.3	92.8	305	24.11***	소득 격차 심화	4.3	11.5	84.3	305	32.90***
	중도	3.8	14.5	81.6	365			5.7	22.5	71.8	369	
	보수	3.8	10.9	85.3	313			7.0	22.9	70.2	315	
	전체	3.3	10.5	86.3	983			5.7	19.2	75.1	989	
특정 정치인들의 추종자들의 과도한 영향력	진보	1.6	9.8	88.5	305	14.46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국제환경	12.8	29.3	57.9	304	18.74**
	중도	3.6	17.5	78.9	365	Pr=0.071		6.6	39.2	54.1	362	
	보수	4.2	14.8	81.0	311			13.2	29.3	57.6	311	
	전체	3.2	14.3	82.6	981			10.7	33.0	56.4	977	

민주주의 후퇴	진보	11.7		88.3	307	126.24***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주의 후퇴	진보	12.1	88.0	307	226.74***
	중도	27.5		72.5	378			중도	35.5	64.6	378	
	보수	43.5		56.5	315			보수	60.6	39.4	315	
	전체	27.7		72.3	1000			전체	36.2	63.8	1000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사례수	Pearson chi2			
민주주의 후퇴 시작†	진보	1.5	1.1	28.5	12.6	1.5	54.8	270	51.48***			
	중도	2.5	1.2	27.5	17.6	6.6	44.7	244				
	보수	3.2	4.0	29.8	18.6	16.1	28.2	124				
	전체	2.2	1.7	28.4	15.7	6.3	45.8	638				
민주주의 가장 많이 후퇴†	진보	0.4	0.4	13.3	15.9	0.7	69.3	270	51.67***			
	중도	1.2	1.2	13.5	21.7	8.6	53.7	244				
	보수	2.4	3.2	18.6	22.6	12.9	40.3	124				
	전체	1.1	1.3	14.4	19.4	6.1	57.7	638				
민주주의 후퇴 시작	진보	2.6	2.0	28.3	13.7	4.6	48.9	307	213.44***			
	중도	6.9	2.4	21.7	19.6	19.1	30.4	378				
	보수	9.2	4.1	16.2	13.7	44.8	12.1	315				
	전체	6.3	2.8	22.0	15.9	22.7	30.3	1,000				
민주주의 가장 많이 후퇴	진보	0.7	0.7	13.7	17.6	5.5	61.9	307	236.99***			
	중도	3.2	2.4	11.4	23.5	23.5	36.0	378				
	보수	2.5	2.9	9.8	14.0	53.7	17.1	315				
	전체	2.2	2.0	11.6	18.7	27.5	38.0	1,000				

* 출처: 한국리서치 2023.01

* 주: *** p<0.01, ** p<0.05,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후퇴’ 긍정 응답자 한정(638명)

〈부록 3-1〉 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결정요인

변수	모델 (1)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후퇴		모델 (2)		모델 (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후퇴		모델 (4)	
	회귀계수 (coefficients)	승산비 (odds ratio)	회귀계수 (coefficients)	승산비 (odds ratio)	회귀계수 (coefficients)	승산비 (odds ratio)	회귀계수 (coefficients)	승산비 (odds ratio)
이념적 보수성(3)	-0.41*** (0.09)	0.67*** (0.06)			-0.68*** (0.09)	0.51*** (0.05)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선호			0.17*** (0.02)	1.19*** (0.02)			0.35*** (0.02)	1.41*** (0.03)
정부기능	1.26*** (0.10)	3.52*** (0.36)	0.86*** (0.11)	2.36*** (0.27)	1.99*** (0.12)	7.33*** (0.85)	1.41*** (0.12)	4.08*** (0.51)
선거과정	-0.36*** (0.14)	0.70*** (0.10)	-0.20 (0.14)	0.82 (0.11)	-0.58*** (0.14)	0.56*** (0.08)	-0.32** (0.15)	0.72** (0.11)
정치문화	-0.02 (0.10)	0.98 (0.09)	0.03 (0.10)	1.03 (0.10)	-0.08 (0.10)	0.92 (0.09)	-0.04 (0.11)	0.96 (0.10)
시민자유	0.32*** (0.11)	1.38*** (0.15)	0.30*** (0.11)	1.34*** (0.15)	0.11 (0.12)	1.12 (0.13)	0.06 (0.12)	1.06 (0.13)
남성	-0.12 (0.13)	0.89 (0.11)	0.00 (0.13)	1.00 (0.13)	-0.33** (0.13)	0.72** (0.09)	-0.18 (0.14)	0.84 (0.11)
연령(5)	0.00 (0.04)	1.00 (0.04)	0.01 (0.04)	1.01 (0.05)	-0.01 (0.05)	0.99 (0.05)	0.01 (0.05)	1.01 (0.05)
호남	0.15 (0.22)	1.16 (0.25)	0.00 (0.22)	1.00 (0.22)	0.36 (0.23)	1.43 (0.32)	0.13 (0.24)	1.14 (0.27)
대구·경북	0.36* (0.21)	1.43* (0.30)	0.53** (0.21)	1.71** (0.36)	-0.26 (0.22)	0.77 (0.17)	0.02 (0.22)	1.02 (0.23)
부산·울산·경남	0.03 (0.18)	1.03 (0.18)	0.05 (0.18)	1.05 (0.19)	0.09 (0.18)	1.09 (0.20)	0.17 (0.19)	1.18 (0.22)
교육수준(4)	0.06 (0.07)	1.06 (0.07)	0.07 (0.07)	1.07 (0.07)	-0.05 (0.07)	0.95 (0.07)	-0.03 (0.07)	0.97 (0.07)
소득(4)	-0.03 (0.06)	0.97 (0.06)	-0.04 (0.06)	0.96 (0.06)	0.09 (0.06)	1.10 (0.07)	0.10 (0.06)	1.11 (0.07)
사례수	986	986	986	986	986	986	986	986

* 출처: 한국리서치 2023.01

* 주: *** p<0.01, ** p<0.05, ()안의 수는 표준오차

〈부록 3-2〉 민주주의 후퇴 요인 인식 결정요인(Relative-risk Ratios)

변수	(1) 대통령 독단	(2) 검찰 편파성	(3) 국회 견제력 부족	(4) 사법부 견제력 부족	(5) 언론 견제력 부족	(6) 정당 비민주 성	(7) 정당 정치인 부패	(8) 과도한 팬덤 영향력	(9) 양당 유리 선거제	(10) 양당 중심 국회	(11) 관용 부족	(12) 무책임 언론	(13) 가짜 뉴스	(14) 극우 집단 행동	(15) 소득 격차 심화	(16) 긴장 국제 환경
이념적 보수성(3)	0.87 (0.08)	0.73** (0.07)	0.97 (0.09)	0.93 (0.09)	0.87 (0.08)	0.95 (0.09)	0.86 (0.09)	0.85 (0.08)	0.96 (0.08)	0.88 (0.08)	1.02 (0.09)	0.86 (0.08)	0.83** (0.08)	0.81** (0.08)	0.97 (0.09)	1.15 (0.11)
민주당- 국민의힘	1.38** (0.03)	1.41** (0.03)	1.19** (0.02)	1.17** (0.02)	1.20** (0.02)	1.07** (0.02)	1.02 (0.02)	0.98 (0.02)	1.03 (0.02)	1.05** (0.02)	1.06** (0.02)	1.06** (0.02)	1.04** (0.02)	1.18** (0.02)	1.11** (0.02)	1.05** (0.02)
남성	1.26 (0.16)	1.29 (0.17)	1.48** (0.18)	1.38** (0.17)	1.29** (0.16)	1.08 (0.13)	1.26 (0.17)	1.02 (0.13)	1.10 (0.13)	1.17 (0.14)	1.05 (0.12)	1.07 (0.14)	1.13 (0.14)	1.06 (0.14)	1.37** (0.17)	1.30** (0.15)
연령(5)	1.00 (0.05)	0.97 (0.05)	0.98 (0.04)	0.97 (0.04)	0.94 (0.04)	1.15** (0.05)	1.09 (0.05)	1.13** (0.05)	0.90** (0.04)	0.94 (0.04)	1.08 (0.04)	1.10** (0.05)	1.09** (0.05)	1.05 (0.05)	0.98 (0.04)	1.03 (0.04)
호남	1.03 (0.23)	1.30 (0.32)	1.26 (0.27)	1.30 (0.28)	1.42 (0.31)	0.96 (0.20)	1.00 (0.23)	0.88 (0.18)	1.07 (0.21)	1.18 (0.23)	1.22 (0.24)	1.46 (0.34)	1.30 (0.30)	1.04 (0.24)	0.88 (0.18)	0.84 (0.17)
대구·경북	0.89 (0.19)	0.89 (0.19)	0.62** (0.13)	0.71 (0.14)	0.76 (0.16)	0.69 (0.14)	0.50** (0.11)	0.62** (0.13)	0.95 (0.19)	0.89 (0.18)	0.96 (0.19)	0.82 (0.18)	0.58** (0.12)	0.66** (0.14)	1.03 (0.21)	0.64** (0.13)
부산·울산 경남	1.21 (0.22)	0.90 (0.16)	0.87 (0.15)	0.82 (0.14)	0.81 (0.13)	1.14 (0.20)	0.90 (0.17)	1.21 (0.22)	1.01 (0.17)	0.85 (0.14)	1.48** (0.25)	0.80 (0.14)	0.75 (0.13)	0.95 (0.17)	0.91 (0.15)	0.76 (0.12)
교육수준(4)	1.04 (0.07)	1.06 (0.08)	1.06 (0.07)	1.10 (0.07)	1.06 (0.07)	1.27** (0.09)	1.21** (0.09)	1.22** (0.08)	1.06 (0.07)	1.05 (0.07)	1.08 (0.07)	1.19** (0.08)	1.28** (0.09)	1.10 (0.08)	1.08 (0.07)	1.05 (0.07)
소득(4)	1.15** (0.07)	1.08 (0.07)	1.02 (0.06)	0.98 (0.06)	0.91 (0.05)	1.04 (0.06)	1.05 (0.07)	0.98 (0.06)	1.07 (0.06)	1.04 (0.06)	0.99 (0.06)	1.00 (0.06)	1.00 (0.06)	1.02 (0.06)	0.88** (0.05)	0.95 (0.05)
/cut1	0.03** (0.01)	0.03** (0.02)	0.03** (0.02)	0.03** (0.01)	0.02** (0.01)	0.02** (0.01)	0.02** (0.01)	0.01** (0.01)	0.03** (0.01)	0.03** (0.01)	0.07** (0.03)	0.01** (0.01)	0.01** (0.01)	0.02** (0.01)	0.01** (0.01)	0.06** (0.03)
/cut2	0.15** (0.06)	0.12** (0.05)	0.18** (0.07)	0.14** (0.06)	0.08** (0.03)	0.11** (0.05)	0.07** (0.03)	0.05** (0.02)	0.11** (0.04)	0.10** (0.04)	0.23** (0.09)	0.06** (0.02)	0.06** (0.03)	0.06** (0.03)	0.07** (0.03)	0.24** (0.09)
/cut3	0.58 (0.24)	0.42** (0.17)	0.90 (0.36)	0.89 (0.35)	0.46** (0.18)	0.76 (0.31)	0.36** (0.16)	0.35** (0.14)	0.71 (0.27)	0.53 (0.20)	0.84 (0.32)	0.34** (0.14)	0.39** (0.16)	0.32** (0.13)	0.41** (0.16)	1.57 (0.60)
/cut4	3.08** (1.28)	1.60 (0.67)	4.70** (1.89)	3.52** (1.39)	1.94 (0.76)	4.06** (1.67)	1.40 (0.60)	1.39 (0.57)	2.77** (1.06)	2.28** (0.88)	4.47** (1.75)	1.42 (0.59)	1.48 (0.61)	1.23 (0.50)	2.07 (0.83)	7.05** (2.75)
사례수	987	986	979	977	979	982	983	981	977	980	979	982	985	982	989	977

* 출처: 한국리서치 2023.01

* 주: *** p<0.01, ** p<0.05, ()은 seEform